

「위안부」 문제가 조명한 일본의 전후(戰後)

이와사키 미노루 · 오사 시즈에

문제의 설정- 「위안부」 문제 4 반세기

우선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싶다. 본고는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을 둘러싸고 과거에 생긴 일들 자체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는다. 또한 「위안부」 제도를 역사상의 다른 사례들과 대조하면서 파악하는 것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최근으로는 역사학연구회와 일본사연구회가 2013년 12월에 개최한 공개 심포지엄 및 역사학연구회와 일본사연구회가 공동으로 편찬한 『「위안부」 문제를 / 로부터 생각하다 - 군사성 폭력과 일상세계』(이와나미쇼텐, 2014)를 비롯한 수 많은 훌륭한 논집과 단독 저서로 그동안 충분히 실행되었다. 오히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안부」 문제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가 되어 버렸는가하는 한가지로 한정이 된다. 물론 이유의 반 이상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만이며,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일과 마주 대하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편만한 역사 이야기에 계속 젖어 있고 싶은 정치세력이나, 그 것을 수용해 버린 사람들의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 장병들에 의해 이른바 「위안부」의 상황으로 내몰린 여성들을 둘러싸고, 국가로서 그 가해 책임을 인정하여,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판단은, 애초부터 이 일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을 욕하는 등의 세력의 손으로 엄정한 정치적 대립의 표적이 되었으며, 그 것이 동아시아 전역을 경직시켰다. 대립은 이미 4 반세기에 이르고, 말하자면 1 세대 분에 해당되는 길이가 되었다. 독일 연구자인 얀 아스만은 20년이라는 길이는 집합적 기억에 있어서 하나의 구조적으로 분기점이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미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버렸으며, 그 동안에도 수 많은 피해자들이, 문제 해결을 갈망하면서 세상을 떠나버렸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4 반세기를 통해서,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을 불가시화해 온 힘을 알게 된 시민운동단체와 역사연구자들의 정력적인 조사를 통해서,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침묵을 깨고 위안부였던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협의(狹義)의 실증적인 디테일과 피해의 현실은 확연히 밝혀졌다. 군이나 행정에 의한 조직적인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위안소」 제도는 군이 만든 것이며, 군이 위안소를 통제관리했다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학 상의 실증수준이 높아진 것과 반비례하듯이 사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이 거꾸로 된 기묘한 관계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가.

분명히 이 것은, 일찍이 어떤 다른 논고에서 논했듯이, 역사수정주의라고 불리는

심성(心性)의 반응행동의 특징이기는 하다. 역사수정주의는 과거에 생긴 일을 둘러싸고 역사적인 사료의 유무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고의로 따지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실증성 차원에서 문제를 논쟁한 적은 없다. 역사적인 사상(事象)이, 그들이 말하는 「사실」이기 위한 요건에 과도의 부하를 주면서, 그 것이 충족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삼아 과거에 생긴 일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역사수정주의자가 상투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역사수정주의는 「위안부」로 동원된 사람들이 받은 피해의 경험을,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상행위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내셔널리즘과 그것에 호응하는 일본 국내세력에 의한 프레임업(날조)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4 반세기를 통해서, 주장내용의 부실화와 함께 비대화한 「반일적」이라는 낙인이 어느새 너무나 당연한 술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태는 심각하다.

본고에서는 「위안부」 논쟁의 4 반세기를 돌이켜 보며, 그 과정에서 한결같이 등장했으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채 있는 논점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지만, 「위안부」 제도의 특성이나 과거사의 경위라면, 이 4 반세기를 통해서 역사가와 시민운동가들의 씨름에 의해 이루어 낸 성과는 훌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악화와 심각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쟁의 경위와는 굳이 거리를 두고 돌이켜 보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 싶다.

덧붙여서 이 「위안부」 문제라는 쟁점은 돌이켜 보면 두 개의 전후가 완전하게 귀결하지 못 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 문제는,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종언으로부터 70 년이 지나면서, 전혀 청산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 전쟁이 만들어 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것은 또 하나의 전쟁, 이른바 냉전종결 이후의 상황에서 출현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전후, 이른바 냉전이라는 전쟁의 종식이 초래한 것이기도 하다. 1989 년 냉전종결 이후, 「기억과 망각」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역사인식을 따지는 많은 국면이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출현했다. 각 지역에서 각각 특징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러시아에서는 민족 문제로서, 동유럽에서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서, 혹은 유럽 각지에 있어서도, 냉전구조에 의해 언어화되지 못 했던 가해와 피해 관계로서, 과거에는 존재하면서도 결코 거론되는 적이 없었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그 단적인 실례라는 역할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기억」이라는 개념을 열쇠 삼아, 냉전종결 이후에 새로운 논쟁 상황이 생긴 것을 「기억론적 회전」이라고 부른다면, 「위안부」 문제가 1990 년대에 쟁점화된 것에는 바로 이 기억론적 회전 이후의 쟁점이라는 동시대적인 특징이 있다. 역사인식에 관한 심각한 논쟁적인 국면은, 대체로 80 년대 말부터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제 2 차대전이라는 세계사 규모의 경험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요인으로 한다. 달리 말하면 집합적

기억론의 위상이 변화했다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바로, 「직접적인 체험에 뒷받침되면서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적인 기억이라는 위상에서 이제는 그런 직접적인 당사자가 부재한 곳에서, 오로지 문화적 표현물을 통하여 재생산될 문화적 기억이라는 위상으로의 전위」를,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억론적 회전 이후」의 변화의 가장 큰 초점으로서 이 4 반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와 논점을 총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선 이 문제를 집합적 기억에 대한 항쟁 과정으로서 다시금 파악해 보고 싶다.

1. 논쟁 과정의 5 단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근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 아시아 여성기금의 경험에서(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アジア女性基金の経験から)’ (平凡社新書, 2015 년) 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4 반세기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전체 프로세스를 3 개 ‘라운드’ 로 나누었다. 1991 년 김학순 씨가 자신이 위안부였던 과거를 밝혔을 때부터 93 년의 고노 담화, 95 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의 시도와 실패라는 과정을 제 1 라운드로 하고, 나중에 확인할 2011 년의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과정을 제 2 라운드, 그리고 아베 정권 하의 현재 국면이 제 3 라운드이다. 국민기금 당사자로서, 이 책을 통해 국민기금을 둘러싼 아슬아슬한 조정과 오산, 실패가 어떠한 배려를 수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 와다는, 예를 들어 2000 년의 ‘여성 국제 전범 법정’ 을 하나의 정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91 년부터 2011 년 직전까지의 시기를 하나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和田의 사례와 같이 착안점에 따라 단계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위안부’ 논쟁의 4 반세기를 다음의 5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1. ‘위안부’ 문제의 가시화와 그 충격의 시기
2. ‘위안부’ 문제가 준 충격에 대한 대항담론과 반론의 시기
3. 무라야마 정권 하의 국민기금과 여성국제전범 법정의 시도 시기
4.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주장이 교착상태에 놓이고, 분열, 분단, 혼미를 더해가는 시기
5. 아사히 신문의 기사철회와 반지성주의적인 부정 담론이 확대되는 시기

제 1 단계

이 대립은 분명히 무엇보다도 하나의 고발에서 시작된다. 즉 1991 년 김학순 씨의 위안부 경험을 토로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김학순 씨의 고발은 8 월 14 일,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동기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국회답변(2)을

한일 시민운동의 협력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전에 전후 일본의 국회 등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보면,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발언자가 채워졌던 시기에 ‘자신도 군에 갔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위안부는 육군에서도 그 어떤 부대에서도 소속부대가 있었다(3)’ 는 등, ‘위안소’ ‘위안부’ 는 일반적인 전쟁터의 풍경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말할 수 없다는 제약과 의식(4)’ 이 결합된 일본군의 종군기와 연대사, 부대사 등 항간에 떠도는 많은 내용과 같은 것에 불과했으며, ‘위안부’ 가 됐던 여성들이 전쟁범죄에 노출돼 있었다라는 자각까지는 없었던 것이었다. 이에 대해 1973 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발언은 정부책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를 드러냈다(5). 1985 년 2 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1942 년생 사회당 의원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나의 전쟁범죄(私の戦争犯罪)’ (1983 년)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해군장교였던 나카소네 총리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다(6).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로서, 전쟁에 대한 서술, 내러티브 자체를 뒤흔드는 형태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은 교과서 검정과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외교문제로 부각된 1980 년대 이후이다. 여기서 그 배경으로 강제연행 등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영향과 함께 국경을 넘은 페미니즘 운동 전개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특기해 두고자 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1980 년대 한국 민주화 투쟁을 통해 단련된 한국의 여성운동이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의 국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과거 전쟁범죄에 그치지 않는 극심한 여성 인권문제로 제기하고 운동을 견인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의 ‘아시아 여성들의 모임’ 은 재한피폭자 지원 운동을 통해 이러한 운동그룹과 만나게 된다. 언론으로서의 발신력도 가진 싱가포르 특파원이었던 아사히 신문기자 시절의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는 한국 여성기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태국 주재 한국인 위안부 여성을 인터뷰해 기사화하는데 성공하고(7), 한편으로 후일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되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자인 윤정옥은 10 년에 걸친 ‘정신대 취재기’ 를 1990 년 1 월 한겨레 신문에 연재하여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이러한 선구적인 의의를 가진 피해여성에 대한 인터뷰는, 홋카이도, 오키나와, 태국, 파푸아 뉴기니와 다른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경을 초월한 시민운동 네트워크의 성과이기도 했다. 논문 서두에 김학순 씨의 고발이 하나의 계기였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당사자들이 실명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데는 한국 민주화 투쟁의 과정을 통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과거의 식민주주의를 묻는 움직임이 배경에서 그녀들을 지탱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1990 년 이후, 일본의 국회 질의도 동시대의 한국 시민운동의 동향에 대응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해갔다. 이와 같이 여성의 인권유린이라는 문제로 인식한다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는 ‘냉전’ 후의 한일간 과거청산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 는 더더욱 그 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그 사건을 한일 국가간, 하물며 양국간의 과거에만 갇아두는 것은 아니었다. 필리핀, 대만, 북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등 일본군의 침략지, 점령지에서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고발은 과거의 얼어붙은 기억을 진술함으로써 군 지배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엇이 불문에 붙여졌는지를 현 세상에 질문했다. 국경을 초월한 시민운동의 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형성한 네트워크는 피해 여성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군사 성폭력이라는 보다 보편적이며 국제적인 과제로 결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성폭력을 둘러싼 인식체제는 피해자가 수치로 인식해야 하는 상태로부터 가해자의 죄를 심판하는 장면으로 크게 전환됐으며, 사죄와 진상규명,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가들은 어떠했는가. 1991년 이후 ‘위안부’ 문제는 과거 전쟁을 상기할 때, 누구의 어떤 경험과 접했는가를 역사연구가들에게 새삼 질문했다. 주로 문헌실증을 수법으로 하는 현대사가인 요시미(吉見義明)가 군의 ‘위안부’ 제도를 명확하게 근거로 하는 방위청 도서관 소장 공문서를 ‘발견’ (1992년 1월 11일 아사히 신문기사)하게 된 계기는 NHK 인터뷰에 답한 김학순 씨의 모습이었다. 흔한 실증주의적 판단처럼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부각됨으로써 그 곳에 사료가 가시화된 것이었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크게 공명하여 역사가와의 만남에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응답해 탈피하는 ‘역사학’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역사가가 전문적 기술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8)’는 증언의 의의를 팽창시켜, 더 많은 증언의 등장과 연구자의 참가를 촉구하게 된다. 동시에 왜 그 시점까지 발견되지 않았는가라는 점에서는 기록된 것과,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내포하게 되는 선별작용과 권력성의 문제로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이 전제로 한 전쟁의 기억과 기록은 ‘냉전’ 하에서 진행되는 전쟁터와 제국공간의 망각과 병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가혹한 ‘경험’과 목소리가 지워진 채로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역사가에 있어 ‘실증’이란 무엇인가라는 인식론적 차원의 질문을 던진 그야말로 ‘사건’이었다.

1992년 후반 이후 국회에서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정부 추궁도 매우 활발해졌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4일, 제2차 조사결과와 함께 내각관방장관 고오 요헤이(河野洋平)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른바 ‘고노 담화(9)’는 관계부처와 오키나와, 미국 자료관과 청취조사도 포함한 사료조사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고노 담화는 정부의 관여를 인정했다. 그 이전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 담화보다 깊이가 있는 것으로 ‘위안소’가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군의 관여를 무겁게 인식했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위안부’였던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온 여성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담화 작성과정에서 ‘위안부’였던 여성

16 명에 대한 청취조사를 반영한 것이었다. 2006 년 인터뷰에 답한 당시 관방 부장관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는 고노 담화의 성립과정을 되짚어 보며 “실제로 위안부였던 16 명의 청취조사 결과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됐던 것임에 틀림없다” 고 반복해서 증언하고 이다(10). 보고서는 내각관방과 외무성을 횡단하는 사무국(외정심의실)을 통해, 즉 정부에 의해 작성, 발표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고노 담화에서 피해자 증언의 정당성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정부 공식 견해에 반영됐다는 경위는 거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단계

제 2 단계는 ‘위안부’ 문제가 집합적 기억이 문제로 전개됐던 시기에 해당한다. 국내 동향으로는 부관(關釜) 재판을 비롯해 총 10 건이 ‘위안부’ 소송이 일본 재판소에 제소돼,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법정투쟁에 의해 피해의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한편, 국제적으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전개되었다. 1996 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 로 간주하는 ‘쿠마라스와미 보고’ 가, 1998 년 유엔인권위원회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에서는 ‘맥두걸 보고’ 가 각각 채택돼, 오늘날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불처벌 연쇄를 끊는다’ 는 목적 하에 일본 정부에 법적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가 부여되었다. 고노 담화와 함께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가 1994 년에 발표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 이, 1995 년에는 전후 50 년의 ‘무라야마 총리담화’ 가 이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발표되었었다. 2 개 유엔 보고 사이에는 1997 년도 검정 교과서 채택을 위한 중학교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언론공격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먼저 세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말과 행동’ 의 진의가 문제시되었던 것이다. 수정주의적 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바로 이 1995 년, 96 년이었다.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이 반동작용의 차이점은 서브컬처를 배경으로 한 수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 실제로 역사교과서를 작성하고 교과서 채택운동을 ‘풀뿌리’ 운동인 것처럼 추진한 것도 새로운 전개 양상이었다. 어디까지나 반동작용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김학순 씨의 고발 이후에 나타난 반향과 반응을 통해 검정교과서는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해 강제연행 및 ‘위안부’ 를 기술하게 되었으며, 1996 년 6 월에는 중학교 교과서 기술에 관한 검정합격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7 권에 모두 ‘위안부’ 가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橋本 내각 하의 자민당 내부에서 비판이 분출돼,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 이 ‘위안부’ 기술의 삭제 결의를 채택하는 등, 여당 정치가가 직접 교과서 내용에 개입하는 움직임 보였다. 자유주의사관 연구회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97 년 1 월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위를 정리한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는 지방관도 포함한 사론이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1997년 중반 무렵부터의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에 큰 전환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11). 무엇보다도 '4년 전 고노담화 발표시에 보여준 피해자에 다가서는 태도의 편린을 느낄 수 없는 매우 냉담한 논조'였다. 국회에서의 정부 논의도 이러한 반발 담론을 뒷받침했다. 1997년 5월 27일, 중의원 결산위원회 제2분과회에서 당시 위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7권에 모두 '이른바 종군위안부 기술이 게재되어 있다'는데 강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것, 이 강제라는 측면이 없다면 특기할 필요가 없다' '강제성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할 문서가 나와 있지 않다'라며 문제를 매우 편협하게 설정하고, 전형적인 역사수정주의 담론을 전개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이 제2단계에서 단번에 경직되어 버렸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재하게 된 '위안부'에 관한 기술내용이 다시 모든 공교육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되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이는 지자체와 교육위원회,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각지 교과서 채택과 심의에 가해진 다양한 조직적 정치적 압력으로 나타나게 되며, 언론과 교과서 제작사의 '자숙' '자율규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역사수정주의'라는 말로 일본에서 역사인식 문제가 제기된 첫 시기이기도 했다.

역사수정주의 논리와 심성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없다는 일면도 있었다. 수정주의에 대한 실증주의적 반박에서는 종종 혼란이 생긴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수정주의는 때로 실증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히려 그 실증적 반론의 수법 자체를 진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시 된 것이 집합적 기억의 동태라는 자각을 보다 분명하게 가졌다면, 이 시기의 대립과 논쟁도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었을 지 모르겠다.

제3단계

제3단계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그 중 하나가 고노담화에 대응하는 국민기금이라는 활동이며 또 다른 하나가 VAWW-NET(「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실시된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이라는 도전이다.

실정법 차원에서 현실의 공권력이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을 때 보다 큰 여론과 함께 그 기만을 돌파하는 방법으로서 민중 법정을 여는 방법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러셀 법정 등의 전례가 축적되어 있다. 실제로 여성국제전범법정에는 전세계 30개국으로부터 약 400명, 연일 1200명이 참가하여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에 퍼져 있었던 구일본군의 전선과 군사 점령지가 ‘위안소’ 설치 공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8개 지역과 국가의 피해여성 64명이 참가하여 증언자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북한과 한국이 남북 코리아로서 등장한 것도 큰 의의를 지닌다. 기획 내용 중에는 콜롬비아와 오키나와 등 그 시점에서의 외국군 주둔지대와 분쟁지대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었다. 과거의 군에 의한 조직적인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온 악순환의 되풀이는 군사성 폭력이라는 보편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켰다.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참가했던 독일의 레기나 뮐엘 호이저는 전쟁 기억의 문제 구성 중에서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가시화되지 못 해 왔는가를 강하게 인식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한다(일어 번역판 『전쟁터의 성』 이와나미쇼텐, 근간 예정).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와 구중주국 네덜란드의 각각의 생존자들이 ‘판결’을 듣고 함께 서로 손을 잡는 광경도 펼쳐졌다.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활동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국민기금은 한일간의 협상을 어떻게 비집어 열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 최악의 평가(딱지 붙이기)로서는- 마치 그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매수’인 것처럼 치부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해 국경을 초월한 시민운동이 생존자들을 지원하여 실현된 여성국제전범법정은 많은 운동가들에 의해 감격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대응 활동이 서로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기금을 추진한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는 그 당시 와다 하루키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프로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앞에서 소개한 저작물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금을 둘러싼 시도가 ‘적’의 공격으로 단순화되어 받아들여진 것은 이 시기의 하나의 불행스러운 일이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 매스컴들은 거의 묵살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NHK의 ETV 특집이 방송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가의 개입에 의해 조작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의 아사히신문 문제와 연결되는 매스컴의 자율성, 윤리성의 결여라는 문제는 이미 이 ETV 문제로 명확해져 있었다. NHK 프로그램에 압력을 가해서 내용을 변경시킨 세력은 현직 국회의원들이었다. 방송 전날 나가타초(일본 정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부장관과의 면회를 끝낸 NHK의 간부는 갑자기 프로그램 재편집의 지시를 내렸다(나가타 고조(永田浩三) 『NHK 철벽같은 침묵은 누구를 위하여-프로그램 변조사건 10년째의 고백』 가시와쇼보, 2010년). 노골적으로 매스컴을 억압하고 유도하는 이러한

수법은 제 2 기 정권에 이르는 아베 내각에 의해 확실하게 답습되고 있다. 그 후 재판이 제기되었으나 이 시기의 방송법 위반이 폭넓게 문제시되지 않은 채 묵과되고 마스크 내부에서 시종일관 서로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은 그 후에 심각한 악영향을 남겼다.

국민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회유·매수라고 치부되어 표적이 됨으로써 여기에 관계한 당사자들의 복잡한 정치적 판단이나 어려움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대해서도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군의 전후 처리를 둘러싼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은 최종 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정대협은 이 법정에서 ‘민족적 경험이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여 법정을 운영한 활동가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비판 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 방법을 둘러싸고 큰 인식의 차이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별로 표출되지 못하고 문제시 되지 않은 채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여성국제전범법정이 처음으로 문제를 ‘재판한다’라는 관점에서 초점화시켜 리드레스(redress 보상)라는 논점을 제기한 점, 군사성 폭력을 군대에 의한 군사 점령과 주민과의 보편적인 관계로 확대해서 보여준 점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사실 이러한 부분 자체에 대해 국민기금도 결코 부정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특히 리드레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큰 정치적 전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측면에서 투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의 역학관계 안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리드레스가 어떠한 식으로 가능했었는가를 재검토하는데 있어서는, 국민기금이 실제로는 많은 경우 각국 정부를 협상 상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사정도, 그 움직임을 자유스럽지 못하게 만들어 차질을 빚게 한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커밍아웃한 인도네시아의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국민기금의 운용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다. 원래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이외의 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사실 인정을 고노담화에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제 4 단계

와다에 의한 시기 구분에서는 첫번째 ‘라운드’가 연속적으로 긴 시간의 시기로 간주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앞에서 언급한 국민기금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여성국제전범법정을 취재한 ETV 특집 변조 문제 등이 네번째 단계에서는 분열, 분단, 혼미스러움이 확산되었다.

특히 2005 년의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한 NHK 의 프로그램 변조 사건의 초점화는 그러한 느낌을 더욱 증폭시켰다. (미디어의 위기를 호소하는 시민 네트워크 편 『프로그램은 왜 변조되었는가—「NHK·ETV 사건」의 심층』 이치요샤, 2006 년)

한편 이 문제를 둘러싸고 몇 가지 논쟁적인 대답점이 표출되었다. 예를 들면 ‘위안부’ 논쟁의 존재방식을 둘러싸고 메타 차원에서 재귀적(再歸的)인 물음을 던진 우에노 치즈코(上野 千鶴子 『내셔널리즘과 젠더』 세이도샤, 1998 년)와 박유하(『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사토히사시 번역, 헤이본샤, 2006 년)를 둘러싸고 문제의 방법론적 심화와 자기성찰의 계기가 만들어진 측면도 있었으나, 때로는 이에 대해 운동의 분열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는 주장도 나왔다. 박유하에 대한 비판은 현재의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아사히신문출판, 2014 년)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그동안 이토록 비판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 사이에서 박유하의 텍스트는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 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도 이 시기에 운동의 존재방식에 대한 자성적인 물음과 문제 제기를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박유하와 마찬가지로 정대협 측에도 문제의 단순화와 일면화(一面化)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자문자답이었다(야마시타 영애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위안부’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각』 아카시쇼텐, 2008 년). 그러나 분열과 분단 속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문제의 국면이 풍성해지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위안부’ 논쟁은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보편적인 문제 보다는 민족적 언설로 회귀하는 듯한 경향이 강해졌으며, 게다가 본래 이 문제와 모순될 수 있는 국제적인 맥락이 덧붙여지게 된다. 예를 들면, 정대협은 국제적인 반향을 만들어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한편으로 문제를 국가 단위로 잘라 놓는 것과 같이 단순화해 버리고 말았다. 미국 하원에서는 정대협의 주장을 지지하는 형태로 의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위안부’ 에 대한 이미지가 세밀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에서의 — ‘소녀상’ 으로 상징되는— 피해자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문제를 심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소녀상’ 으로 상징되는 ‘위안부’ 이미지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역사수정주의자들로부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소녀상’ 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일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니는 복잡한 politics 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젠더를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에노 치즈코가 『내셔널리즘과 젠더』 에서 ‘모델 피해자론’ 이라는 형태로 이미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혼미스러움을 겪고 당도한 곳에 2011 년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분열과 분단 속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판결에는 전 ‘위안부’ 여성들이 요구하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정대협이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또한 한편으로 헌법재판소가 제 3 국에 의한 조정이라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1965 년의 한일청구원협정에 의해 배상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는 논의가 드디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도 생겨났다. 이는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기회였으며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시대를 바꾸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와다 하루키는 설득력있는 언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이 문제에 관한 감수성을 전혀 가지지 못 했던 당시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의해 아무런 대처 없이 상실되고 말았다.

제 5 단계

그리고 제 5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목격되어 온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산발적인 반동 현상이 나타났다. 2014 년에는 아사히 신문에 대하여 이상할 정도의 공격이 아베 정권에 의해 전개 되었다. 심한 비난과 공격을 받은 것은 1990 년대 전후라는 가까운 과거 시점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도 자세, 시각에 대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언뜻 보기만해도 그 상황의 불합리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돌이켜 보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미디어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다.

김학순씨의 커밍 아웃을 일본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앞에서 논하였다. 1980 년대말부터 1990 년대에 걸쳐, 한국 ‘정신대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가 진행된 것도 언급하였다. 아사히 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강제연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장 먼저 접한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에무라 기사는 실제로 ‘위안부’ 로 여겨진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지도, 대화도 하지 못 하고, 정신문제연구소가 테이프에 녹음한 ‘위안부’ 였던 할머니들의 증언을 모으는 작업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1991 년 8 월 11 일, 그 존재를 기사화 하였다. 기사에는 실명을 표기 하지도 않았다. 칼럼 기사에 여성 두 명이 나온 사진의 설명문에는 ‘중군 위안부였던 여성의 (증언) 테이프를 듣는 윤 대표 [오른쪽]-10 일, 서울시에서 우에무라가 촬영’ 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것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3 일 후인 8 월 14 일, 일본정부 답변에 대한 김학순씨의 기자회견과, 특히 12 월 6 일, 김학순씨도 참여한 전후 보상을 묻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제소와 방일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를 많은 일본어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즉, 이 시기에 미디어 보도의 세계에 한결 같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독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저널리즘 전체의 움직임이 확실히 존재하였으며, ‘위안부’ 문제를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로서 보도하는 것은, 현재 산케이, 요미우리 등이 음모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단은 상당히 일반화된 것이었다. 피해자의 아픔에 반응하는 자세나 내용도 결코 아사히 신문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산케이 신문의 오사카판이나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1990년대 전반의 지면은 피해자를 취재하여 ‘정신대’라는 용어를 쓰면서 신문 지면을 구성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미 1991년 9월 3일 ‘정신대’ 문제에 대한 해설을 윤정옥씨의 사진을 넣어 게재하였고, 한국 원고단이 일본정부에 제소한 1991년 12월 6일에는 석간 일면에 제소한 사실을, 사회면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무거운 과거,’ ‘한을 풀 수 있는 처리를’ 등의 표제를 붙인 기사를 실었다.

더욱이 ‘제소 후, 눈물로 심정을 호소하는 중군위안부였던 학순씨’라는 설명을 붙인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 날인 7일 기사에도 김학순씨의 말을 바탕으로 ‘강제적으로 연행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사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92년 5월 16일이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설에서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인도적인 입장에서의 대응을 바라고 있었다. 1993년 8월 5일 요미우리 신문의 고노담화의 해설 기사에서도, 국가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피해자 측에 선 자세를 선명’히 하였다고 후지나가 다케시(藤永 壯)는 보고 있다. 산케이신문의 1993년 8월 31일 기사는 ‘인권을 생각’하는 특집에서 ‘인생을 걸고 실명으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게재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위안부’에 대한 보도가 아사히신문의 어느 특정 기자의 조작에 의해 국제적 반향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은, 단순히 이 논쟁이 시작될 때의 미디어의 상황을 숨기고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문 미디어의 진면목이 오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속보성을 살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 시기의 기자들의 반응이나 보도 자세는 실로 보도 미디어의 작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이후 미디어가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얼마나 열심히 전달하려고 했던가는, TV 보도프로와 다큐멘터리 필름까지 포함하여 본다면, 더욱 더 확실할 것이다. 그런데 ‘위안부’ 뿐만이 아니라 이 논쟁의 발단이 지워지려고, 다른 스토리로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5년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가까운 과거에 대한 서술은 방식은, 보수파 신문을 포함한 스스로의 언론 활동에 대한 폭력이며, 한번은 열렸던 가능성에 대한 망각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세 가지 문제

앞 절에서 제 1 단계부터 5 단계까지 단계를 보았으나, 결국 4 반세기에 걸쳐서 ‘위안부’ 논쟁 속에서 속죄와 화해라고 할 수 있는 국면은 조성되지 않았다.

일본 근현대사의 오욕을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 경향은, 2000 년대에 접어 들어서도 전혀 불식되기는 커녕, 오히려 신자유주의정책의 진전과 더불어 한층 더 뻗뻗해지고 있다. 90 년대 이후 역사수정주의의 특성에 대해 일찍이 언급한 시점에서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이에 유사한 언설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 위안부문제가 이렇게까지 혼란을 야기한 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역사수정주의적인 조류의 현실부정에 대해, 그것을 극복할 만큼의 여론 형성도, 정치적 결단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를 반지성주의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면에서, 이미 5 개의 단계를 정리하면서 언급 한 것처럼 운동 측에도 대립이 생겨났다. 그 국면을 하나 하나 문제삼지는 못 하나, 전형적인 형태의 대립 국면을 여기에서 잠시 보고자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희생자를 서로 쟁탈한다고 해야 할 사태를 초래하였으며, 여성사/여성학, 반성적 여성사라 등의 학문적 접근 방법의 차이와 대립과도 상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제가 되지 않았던 논점이 그 후 명백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전형적인 예가, 일본인 ‘위안부’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전개를 염두에 두면서, 다시금 ‘국민기금문제’, ‘박유하 문제’, ‘아사히신문 문제’로 논점을 세 개로 나누어 설정해보자.

국민 기금의 문제

첫 번째는 국민기금의 추진 방식과 그것을 둘러싼 ‘위안부’로 여겨진 피해자를 지원하는 자들의 대응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동시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보일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씨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고노 담화에서 기금 구상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많은 정치적인 협상과 정치 판단의 국면이 있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모를 상세한 부분을 밝히고 있다. 그러한 국면 하나 하나에 오산과 오해가 있었으며, 동시에 잡아야 할 기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차질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국민기금 구상은, 처음에 정부 혹은 행정부 어디선가가 그 사실을 흘렸으며, 아사히신문 1994 년 8 월 19 일 1 면 톱 기사로 나온 것을 들고 있다. 그 기사에는 ‘전 위안부에게 미마이킨(見舞金)’이라는 표제와 함께, ‘민간의 성금으로 기금을 구상, 정부는 사무비만’이라고 크게 보도했다. ‘미마이킨은 한국어로 위로금이라 번역되’기 때문에 사죄의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당장 시민운동단체가 이 구상에 대한 반대를 표명 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격 대상으로 기금 구상이 설정 되어 버리는 국면이 생겨났다. 와다씨는 이때의 ‘엇갈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깊이 해석해 했다. ‘그러나 기금 설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마이킨’ 보도에 대해 사업 추진 책임자의 이가라시(五十嵐) 관방장관이 강력하게 반론하지 않은 것은, 첫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더욱이 기금 설치의 발표에 즈음하여 기금사업 정신의 핵심을

나타내는 ‘속죄(償い atonement)’ 라는 단어를 충분히 설명치 못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번역에 있어서 ‘보상(補償)’ 으로 표기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사자였던 와다씨의 증언은, 확실히 기금쪽의 변명이기는 하나, 그는 그것이 1995 년, 즉 전후 50 년에 즈음하여 심각한 대립이 생겨 자민당을 중심으로 급격한 반동현상이 퍼지는 가운데에서의 노력이었다는 문맥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상기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때, 일본의 정계는 전후 50 년 국회 결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격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1994 년) 12 월 1 일에 결성된 자민당내 보수파의원의 모임인 중전 50 주년 국회의원연맹이 급속하게 회원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창립시에는 57 명이었던 것이 1 월 말의 첫 회때에는 143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298 명 중 거의 반이 됩니다. 회장에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 사무국장에 이타가키 다다시(板垣正) 같은 간부의 멤버는 당연한 인물이었으나, 사무국 차장에 조선의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이름이 나온 것에 놀랐습니다. 이 의원 연맹은 ‘쇼와(昭和) 국난에 직면하여 일본의 자존자위와 아시아 평화를 바라면서’ 죽은 전몰자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지난 전쟁에 대해 ‘후세에 역사적 화근을 남길 국회 결의’ 를 용서치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의원연맹은 3 월 1 일에는 회원수가 174 명이 되어 자민당 소속 의원의 삼분의 이에 달하는 놀랄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와다씨는 당시 정치 역학에서는 무라야마 내각이었다는 것을 간신히 단서로 하여 국민기금 구상에 착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은, 국가에 의한 ‘배상 redress’ 이라는 법 제도에서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조치라는 점에서 본다면, 틀림 없이 불충분한 내용이었다. 경위는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기금은 국민의 모금에 의한 것이었지만, 와다씨가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모금으로는 부족해 지급해야 할 ‘속죄금’ 을 200 만엔으로 정한 단계에서 기금 사업의 근본 개념이 수정되어, 나중에 정부가 부족분을 보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에 대한 지급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일이라는 틀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금 사업은 처음부터 국가에 의한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금을 둘러싼 결정적인 대립을 운동 속으로 끌어들이고 말았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도의적 책임’ 을 인정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은 도리어 “사실은 ‘법적 책임’ 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과 같았으며, ‘법적 책임’ 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감정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해 ‘책임’ 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라고 한다. 가장 어려운 매개자의 역할을 굳이 떠안은 와다씨의 회고는 통절하기까지 하다. 와다씨의 기금에 대한 자기 비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인 ‘위안부’ 들이 받아 들일만한 해결을 내놓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와다씨는 그것이

최대의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이 만들어낸 혼란함이 무엇보다도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총리의 사과 편지와 기금의 200 만엔의 속죄금을 받은 여성들을 정대협이 매우 비난하였다는 것이었다. ‘위안부’ 중에서 기금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것을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부정했다. 운동은, 기금을 ‘매수 공작’ 이라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피해자 개인의 차원에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민족 문제’, ‘역사 문제’ 라고 파악하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와다씨는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정대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운동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이러한 와다씨의 지적은, 정대협을 비롯한 운동단체에게 과연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결부된다. 희생자에는 다양성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지나치게 윤리화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일까? 적어도 그러한 운동단체의 움직임은 문제를 경직시켜 버렸고, 대저 피해자 자신이 ‘화해’의 장면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한 디지털 기념관을 인터넷 상에 만든 것도 큰 성공이다. 기금에 반대하는 운동측도 다른 형식으로 기록을 보존하였지만, 그것도 실은 쌍방이 협력해서 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의 문제, 운동 측이 한번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박유하 문제

두번째로 ‘위안부’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그 이론이나 운동에 대한 이해의 대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박유하의 『화해를 위해서』와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반응에 대해 잠시 음미해 두는 것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유하는 세종대학교 일본어학과의 교수이자, 일본근대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적도 있는 출중한 일본어 사용자이기도 하다.

『화해를 위해서』는 2005 년에 한국에서 간행된 직후부터 한국내 운동권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박유하가 문제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까지나 ‘위안부’ 문제와 한일 역사인식이 정체된 책임이 일본 정부와 역사수정주의적인 우파 정치가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동시에 사태가 경직화된 책임의 일단이 정대협에도 있다고 한 부분이다. 그리고 박유하는 그러한 정대협의 문제점이 불문에 부쳐지며 오히려 권위가 부여된 데에는 일본에서의 지원운동 방식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일본 시민과 지식인은 정부를 비판해 왔지만, 그 후 10 년간 일본 정부는 변하지 않았고, 거꾸로 보수화됐다. 그러한 비판이 정부를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강경하게 만들었다면 그 비판의 유효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박유하는 물었다. 그것은 동시에 국민기금의 평가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기금의 시도가 불충분한 것이었으며, 또한 기금 자체가 원인인 실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적’으로 단정하여 오로지 그것을 공격하기만 하여, 피아의 권력관계나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족적인 운동으로 전락해버린 점은 없었을까하는 물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박유하는 나아가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이 논점들을 부연하고 있다. 문제는 박유하의 논의에 그대로 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비판의 논점을 왜곡하거나 명확히 언어화하지 않은 채, 박유하의 언설이 비아냥의 대상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그 행태이다. 한국에서는 『제국의 위안부』의 출판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그 정도로 정대협이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게 된 것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물음은 지금도 결코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다.

박유하가 이토록 맹렬한 반발을 초래한 원인으로서는, 그녀가 논의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없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 또한 전작 『화해를 위해서』에 대해서는, 1990년대 전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과실로서, 성폭력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 상황의 리얼리티에 대한 고찰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박유하가 던진 물음은 식민주주의의 피해자가 가지는 집합적 기억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 중에서도 주로 전쟁 점령지에서 일어난, 군사력을 고스란히 배경으로 한 ‘위안부’와 조선인이 강요당한,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위안부’의 존재의 차이를 문제시하고 있다.

박유하는 제국신민으로서 조선인에게 강요된 ‘자발성’과 그 기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비록 표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존재한 ‘자발성’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의 위안부들뿐만 아니라, 누가 그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있을 수 있는 일, 즉 식민지화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 한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폐는 이제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후, 한국 해방 후에 자신의 <자발성>을 망각의 저편으로 소거해 버리고 싶었던 전 제국신민에 의한 것이었다. 식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항의 땅>이어야만 했고, 그것은 본인의 기억이나 의지를 넘어선, 새롭게 출발한 독립국가의 꿈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자발>에 대한 침묵은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럴’이기까지 했을 것이다. 그 출발부터 봐도 ‘포스트 식민지국가’는 대부분의 국민이 경험한 <과거의 부정>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수의 저항자들—예를 들어, 상해 임시정부나 이승만 임시정부대통령, 중국 동북부 만주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나 국내에서도 ‘반체제파’였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기억을 중심기억으로 하여 재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중략] <위안부들의 애국>이 망각되어 온 것은 먼저 그러한 구조가 만든 것이다. 그것과 비슷한, 일종의 망각과 은폐가 위안부와 정신대와의 혼동에서도 일어났다고 생각된다(『제국의 위안부』 61-62 쪽).

‘위안부’ 문제나 역사인식 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안에서 그 지배에 협력할 수 밖에 없었던 양상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순수하고 아름답게 자기를 빚대기 쉬운 특정 모델 피해자상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위안부’ 문제를 민족의 연설로 이야기하려고 할 때—분명 그것은 식민지주의로 인해 일어난 비극임에 틀림없지만—, 희생자를 저항의 주체로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박유하의 지적 안에서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하는 논점일 것이다.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는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한다. 전시하에 적에게 살해당한 ‘여자’를 저항한 민족 영웅으로 찬양하는 한편, 성폭력의 피해자를 ‘적의 여자’로 간주해 민족의 수치로 인식하여 제재나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구조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될 논점이다.

물론, 박유하의 지적은 옳다고 일본인인 본고의 저자가 말하는 이 구도 자체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박유하의 지적을 외면하면, 결국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될 국면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고, 대립을 갈수록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더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가 조작 가능한 내셔널리즘의 교섭 카드로 폄하되기도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 문제라고 일본 정부가 강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측 당사자가 박정희였는데, 그 세력의 지원을 받는 딸 박근혜가 그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정치적인 흥정에 사용하고 있는 매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아사히신문 문제

세번째로 아사히신문이 ‘요시다(세이지) 증언’에 근거한 기사를 철회한 것과 관련된 소동에 주목해 보자. 이 사건은 바로 집합적 기억을 둘러싼 싸움터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아사히신문을 둘러싼 사태로서 크게 두가지 사태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하나는 다섯 단계로 전술한 것과 같이 총리관저와 미디어, 나아가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 사실 인정에서 크게 어긋난 반아사히 캠페인이고, 그에 대한 아사히신문의 애매한 대응이다.

그것과 함께, 아사히신문의 전직 기자였던 우에무라 다카시를 둘러싸고 악명 높은 극우 논객과 우파 미디어, 거기에 인터넷에 의한 사실무근의 공격이 퍼져갔다.

전자의 문제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오키 오사무의 『저항의 거점에서부터』와 우에무라를 지원하는 단체의 빈틈 없는 설명과 반격에 의해 그 전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냉정하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후자의 우에무라 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격도 실제 기사 내용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웹 상에서의 근거 없는 헤이트 스피치는 물론이거니와, 사쿠라이 요시코나 니시오카 쓰토무와 같은 우파 미디어의 장에서 우에무라를 중상하는 사람들의 말도, 조금만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판명되는 잘못된 사실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뿔어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면 사실을 참조하라는 주장 자체가(그 자체가 아무리 정당한 지적일지라도) 거의 무의미하다. 집합적 기억을 둘러싼 논의를 할 때, 실증주의적 절차에만 의거해서는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들은 집합적 기억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도 쉽게 실증주의와 관계 없는 곳에서 문제의 조작이 버젓이 통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해 두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각오가 부족했던 것이, 이들 반지성주의의 변성을 허용하고 만 잘못일지 모른다.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들은 적절한 정치적 판단력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이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제에 대한 세심함을 가짐과 동시에, 입장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잘라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혼미스러움 속에서

우리 저자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이 사회의 집합적인 기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해왔다고 생각한다. 2004년 첫점에서는 “내셔널리즘과 젠더”로 대표되는 우에노 치즈코의 물음을 대표적인 사례로 고찰하였다.⁽¹⁵⁾ 혹은 2005년의 이 이와나미쇼텐 강좌에서는 역사수정주의의 공통되는 논리와 심성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서브컬처의 특성에 의해 강하게 규정된 90년대 이후의 양상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과 함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찌면 한 단계 더 심각한 것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사태는 더욱 비관주의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해왔듯이 ‘위안부’ 문제는 적어도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피해자인 여성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상을 받고, 또한 그것이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와 일본의 시민 사회의 집합적 기억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의 수준은 명확하게 후퇴되어 버렸다. 논쟁이 장기화되고 그것이 한일, 중일의 외교문제 현안으로서 단순화되어 인식되는 장면이 앞으로 나올수록 사회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제를 문제로서 고찰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후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둘러싼 감수성의 열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책임은 역사수정주의적 심성에 매달려서 일본의 정치를 가로채고 있는 우파 정치가들에게 있다는 것,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함부로 날뛰는 것을 허용하는 일본 사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동시에 ‘위안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를 고발해온 반대운동 측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논의의 의미도 평가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초점으로 간주하여 재고해왔다.

경험적으로 보아, 운동측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운동가들 사이에서, 혹은 그 동조자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자 두 사람에게는 쉽게 예상이 간다. 이러한 재귀의 시각은 운동이 분단되어 버리고 침체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반성하는 뜻에서 물음을 던지는 것인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동열인 ‘적’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여 잘라버릴 것이다. 정면에서 더구나 공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주어지는 일도 없이 얼핏 내비추거나 야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짐으로써 이러한 논의와 그것을 한 사람이 단숨에 정리되어 버리는 광경을 적지 않게 보았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당연하게도 비판이 이른바 진공상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에는 논쟁과 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를 내재적으로 고찰하려는 가운데 도출되는 논점을 왜곡(데포르메)시켜 그것을 이용하여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폄하하고 아울러 식민지 지배와 전쟁시의 가해 등의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역사수정주의의 반지성주의가 끊임 없이 틈새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의 현실을 우려하여 문제제기 하려는 자가 그러한 역사수정주의자와 같은 분단자로서 비난 받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견해의 차이와 자질의 차이에서 상이한 평가와 판단이 있을 때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비판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연구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위안부’ 문제는 때로 강력한 내셔널리즘적인 선입관이 개입되어 문제가 단순화되어 버리기도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운동 국면의 험난함에서 오는 고립감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시도와 주장을 운동을 분단하는 ‘적’으로만 생각하여, 그것과 차별화하거나 그것에 대한 결연한 거부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가까스로 안신감을 얻는 내적 회로가 만들어진다. 운동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적 기저이므로 그것자체가 실로 많은 차이 속의 하나의 경향성을 지적하는 데 지나지 않으나, 그러한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야마시타 영애는 전술한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에서, 이러한 운동을 둘러싼 어려움을 민족으로서의 피해와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상처의 관계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적인 여론과 운동이 민족문제의 관점을 강하게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이러한 관점은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민족문제로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때 피해자들은 같은 민족의 일원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그들이 받은 피해가 민족의 피해로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 . .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그들의 상처는 육체적으로도 마음의 상처라는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민족적

피해는 그 개별적 피해의 내용을 구성하는 환경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중심은 아니다. ‘위안부’가 된 여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스스로가 받은 성폭력으로 인한 심신의 아픔이다. 그것은 피해를 받은 그 당시의 상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 여성을 괴롭힌다.

그러한 여성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할 때 피해자들이 이러한 상처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접하고 치유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이 없는 한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어진다. 또한 그러한 아픔도 이해하지 못 하고 상상하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피해자 간에 신뢰 관계가 조성될 리도 없다. 그 동안 몇몇 국면에서 발생했던 피해자와 지식인 활동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의 하나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운동가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야마시타는 스스로도 운동의 와중에 몸 담고 있었던 경험에서 충분히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야마시타의 논의 가운데서는 여성학적인 계기 대 민족적인 계기라고 하는 대조가 항상 비판의 관점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는 식민지배 하에서 조선인이 강요당한 복잡성에 따라 ‘위안부’라고 하는 피해자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운동쪽에 있는 내셔널리즘과 목시적인 모델피해자상의 문제를 실랄하고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결의에 대해서도 그 다의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국제적인 압력은 유효한 무기이다. 실제로 이 점에 관하여 정대협외의 국제 전략은 유효하게 전개해왔다. 일본 국내의 운동을 목살하고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그러한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려는 아베정권도 미국 등 각국 의회의 결의와 외교적인 압력에 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부의 내셔널리즘을 지렛대로 삼아 국제문제화 하려는 전략은 동시에 이 문제를 유명무실화 하는 효과도 수반했다. 첫째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평평하고 통속화된 형태로 확산되는 상황이 종종 빚어졌다는 점이다. 이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군과 성폭력의 보편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생각해야 할 회로가 상실되어, 문제가 일본의 특수한 사상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점이다. 한국의 운동은 그러한 오해와 왜소화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인식하면서도 운동의 역동성 가운데서 그러한 점을 시정하거나 심화하는 것에 적어도 지금 현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에서 식민지주의 폭력이 일으킨 사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군사기지, 군사시설 주변에서 끊임 없이 재생산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 물음을 던지는 지점까지 논의를 추궁해야 할 것이다.

각국 의회에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결의는 커다란 전진이기는 하나 그것을 넘는 지점을 항상 바라보지 않는 한 거기에서도 민족주의로 인한 기억의 조작이 일어나버릴 것이다.

일본 안에서는 어떤지 돌아보기로 한다. ‘위안부’ 논쟁의 형태를 전후 역사의 문제로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 역시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전쟁책임·전후보상을 계속 회피하고 역사문제에 관한 논의라는 면에서는 반복강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좌익·반대운동 쪽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전후를 통하여 중요한 국면에서 종종 빠져버렸던 정치문화의 자가중독이라고 해야 할 상황을 현재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운동의 상징적인 자산을 운동 스스로가 내분을 통해 훼손시켜 버려 자기들의 운동에 대한 평가를 떨어트리는 실패를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이 ‘위안부’ 논쟁의 4 반세기였다고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위안부’ 문제가 던진 물음을 받아서 새로운 성과와 인식을 만들어 온 사람들에 대해 그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동시대적 감각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아사히신문을 둘러싼 논의는 ---논쟁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이미 논쟁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캠페인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정치적인 것의 빈곤이라는 사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 이미 때가 늦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잿더미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난다는 불사조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그 잿더미 속어야말로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은 끝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자신과 다른 상대에게 배신자와 적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는 행위도 그만둬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 사람들의 다양한 상상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요구되고 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것같은 해결은 아무 데도 없다. 집합적인 기억이라는 불확실한 것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항쟁의 특성과 현단계의 여러 차트를 보면서 운동을 구축해 나갈 수 밖에 길은 없을 것이다. 운동은 어떤 국면에서 대담하게 변할 경우도 있다. 그것을 한국의 민주화 항쟁은 제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4.3 사건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그토록 철저한 침묵 속으로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침묵 속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떠오르고 정식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제주도에 기념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관계자에게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지 모르나

그래도 국면 전개라는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전개를 어찌하여 일본의 ‘위안부’를 둘러싼 활동은 손에 쥌 수 없었던 것일까.

여러 차례 참조한 와다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와다의 말을 인용하면서 글을 맺겠다. 와다는 ‘지금’을 규정하면서 말했다.

‘오늘날의 한일 관계의 위기는 구조적인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현명한 결단과 적절한 노력이 있다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진전시킬 수 있으며 한일관계는 엄동설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2 쪽)